

#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을”

“남부경제권 신 성장 동력”  
도의회 의장단, 10일  
국토부에 전주-김천철도  
국가철도망 포함 건의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송 의장과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우리 나라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그런데도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한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적인 소통과 화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의장단은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게 될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6개 시·도의회는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국가철도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전주-김천 철도는 전북과 경북의 오작교가 될 것”이라며 “동서화합과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전남북 초광역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심도 논의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임실  
육정호·치즈테마파크 등 방문  
심민 군수와 발전방향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임실군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섬진강댐 육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을 직접 찾아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심 민 임실군수와 함께 지역특화 성장 전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첫째 날인 1일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보물인 육정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물안개가 피어나는 봄여석을 배경으로 임실군의 회 진남근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함께 국사봉에서 육정호 친환경 생태 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참여정부 때 신일력사업으로 시작한 임실치즈의 랜드마크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실치즈축제와 연계한 관광,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장과 임실치즈 숙성실을 둘러보고 임

이어 지난 2019년 전라북도가 완료한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용담댐 용수공급을 위해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육정호 수변도로 개설과 ▲담주변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및 쿼비 지원, ▲섬진강댐 총저수량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중앙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육정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전라남북도가 함께 계획하고 있는 초광역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심 군수는 “오수외관관광지 활성화와 세계명품 테마랜드 관광지 조성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심 군수는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전북 중심의 임실군의 발전 방향과 현안을 나누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임실군 방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현 민에 다시 찾은 임실군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전략에 박수를 드리고 앞으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기자

## 민주 전북도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환영”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앞장설 것... 지위·정보 이용 사적이익 추구 사전 차단 장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을 알린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4일 유익식(안주군의회의원) 대변인을 통한 논평에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도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외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셨다”면서 “이로서,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서 백신 수급 안정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온다”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로서는 방역에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각심을 더욱 높여 주겠다”며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치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마음으로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발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들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서 백신 수급 안정 메시지

## 수소환원제철 투자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민주 신영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은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날 30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지원에는 신성강·원천기술에 범주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해 해의 주요요소에서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00억 엔을 투입해 대포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국책연구사업은 지난 2017년도부터 시작한 COOLSTAR가 유일하고, 그마저도 100% 수소환원이 아닌 15%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유호상 기자

##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병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정 건을 직접 대면 보고 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병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청장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이어져온 지 60일만이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분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법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뉴시스

## 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의하에 범죄경력 조회하도록 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에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